

“이재명 1심은 정치 판결”...야권, 탄핵 공세 ‘고삐’

공직선거법 1심 집행유예...국회의원들, 연대 활동 확산 계획 尹 탄핵 연대 “시민사회와 연결 강화”...개헌 연대, 의견 수렴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응책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장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은 것은 ‘정치적 제거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요인이 아닌 하락 요인”이라며 “이번 판결로 정권 반대 투쟁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기는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한층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도 당 내에서 감지된다.

지난 13일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명이 모였다. 임기 단축 개헌까지 도모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에도 야당 의원 약 30명(중복 포함)이 가입했다.

두 모임은 이 대표 선고 이후 국회 밖 단체와 결속을 강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탄핵 의원연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탄핵 의원연대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사회와의 연결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의원연대 관계자도 “전국에서 야당 당원과 시민을 만나면서 아이디어와 여론을 듣는 일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개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대표 재판에 대한 비난 발언이 쏟아졌다.

이처럼 야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표출되는 강경 기류와 달리, 정작 윤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의결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촉구 집회를 ‘이 대표 사건 판사를 겁박하려는 집회’라고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의집회는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무관”이라며 “판사 겁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선고된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당내 예상치를 훌쩍 웃돈 상황에서 이 사건의 2심과 3심, 그리고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을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처지다.

결국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의석수를 앞세워 대야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탄핵이나 임기 단축 주장에 대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거리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反 이재명’ 기치 대야 강공모드

‘사법 리스크’ 강조 내부 결속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 민주당이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 것을 ‘판결 불복’이자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재판을 앞둔 이 대표를 향해 “담담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가 선고받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중당 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판결에서도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자선한다. 김 여사 이슈로 다시 표면화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과 당내 계파 대립도 단일대오 아래 잠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쇄신’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한 대표를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대표 측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법 상식과 동떨어져...정의가 결국 승리”

광주·전남 민주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잇따라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3심 중 1심의 결과라며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역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2심, 3심의 절차가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건희 정권 재판부의 제1야당 탄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표

를 아무리 탄압해도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적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 대표 판결에 대해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며 “의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사법부는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목포) 의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정적 살인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야권, 서울 총출동 ‘김건희 특검’ 촉구

민주, 집회서 ‘李 유죄’ 판결 비난...군소 야당선 ‘尹 퇴진’ 발언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를 열었다.

광주·전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구의원 등도 모두 서울에 총출동해 특검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3주 연속 주말 집회로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하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군)’ 등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압도적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야말로 반(反)헌법세력”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군소 야당과 함께 시민단체 주체 집회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과 9일 집회는 자체 행사로만 치렀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의 정당한 분노의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혁신당 총선 구호는 ‘3년은 너무 길다’였지만 이제 기간을 줄였다. 석달도 너무 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